

6·25전쟁과 한·미·일 공조(共助)의 형성에 관한 연구

李 鍾 判*

1. 들어가며
2. 한·일 양국의 배타적 관계
3. 미국에게 한국과 일본의 정치 및 전략적 가치
4. 미국의 6·25전쟁 개입: 유엔의 집단안보
5.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
6. 한국의 중립화 방침과 일본의 군비증강
7. 결론을 대신하여

1. 들어가며

6·25전쟁은 크게 보면 제2차 세계대전 말기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미소의 세력 경쟁과 한반도 통일국가 수립의 주도권을 둘러싼 한반도 내부의 대립이 교착·융합된 전형적인 국제내전이였다. 이것은 남북한 사이의 내전

이었던 동시에,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이기도 했다. 냉전이 세계적인 현실문제가 되는 계기가 되어, 20세기 후반의 국제정세 기조를 형성하였다. 6·25전쟁을 계기로 그때까지 주로 정치적·경제적인 수단으로 싸웠던 냉전은 군사적으로 대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 주도하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반공군사포위망이 형성되었다.¹⁾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진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즉, 강화조약이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을 제외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들을 중심으로 조기에 체결되었다. 미일안보조약의 체결은 일본을 서방진영으로 편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6·25전쟁 특수에 의한 경제부흥이 시작되었고, 더욱이 일본재무장이 시작되는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²⁾

한일관계는 오랫동안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인하여 해방 이후에도 배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주일미군의 투입으로 일본의 미 극동군사령부는 유엔군사령부를 겸무함으로써 6·25전쟁을 지휘하는 전쟁지도본부로서, 일본은 후방지원기지로서 활용되었다.

6·25전쟁 기간 중에 체결된 미일안보조약³⁾은 한국에게도 한반도 유사시에 주일미군 및 그 시설의 사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6·25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후방을 지원하는 중요한 존재다. 이 두 조약에 의해서 한·일 양국의 안보는 미국을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연동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태평양전쟁의 전후처리 과정 및 6·25전쟁을 통하여 태평양전쟁 기간의 연합국인 미국과 소련은 적대관계로, 적대국인 미·일 간은 동맹관계로, 배타적인 한일관계는 미국을 매개로 하는 공조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1) 이종환 역, 『일본의 6·25전쟁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p. i.

2) 위의 책, p. ii.

3)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미일안보조약도 함께 이뤄졌다. 1952년 4월 28일 조약발효.

* 영남대학교 교수

본고는, 태평양전쟁 이후부터 동북아시아에서 국가 간의 세력 재편성 과정, 이와 아울러 한·미·일 3국 간 공조(共助)관계가 형성되는 경위를 한 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의 두 조약 체결 시기까지 미국의 한국, 일본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다.

2. 한·일 양국의 배타적 관계

태평양전쟁이 종결되면서 한국과 일본은 맥아더가 지휘하는 미 태평양육군 예하부대에 의해서 군정이 실시되었다. 한국을 통치하던 주한미군은 한국의 정부수립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49년 6월 29일에 철수하였으나, 일본을 통치하던 주일미군은 태평양전쟁의 법리적 종결인 강화조약까지를 목표로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다. 태평양전쟁의 전후처리를 담당하였던 연합군사령부(GHQ/SCAP⁴⁾)이면서 미 극동군사령부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주일미군이 유엔의 이름으로 전쟁에 참전하면서 6·25전쟁을 지휘하기 위하여 유엔군사령부의 기능을 겸하였다.

최근의 미국 군사작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은 분쟁지역의 주변국을 후방기지로 활용하여 군사작전을 전개한다. 6·25전쟁 당시, 미국은 일본기지를 성공적으로 활용했다.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다음의 예를 봐도 알 수 있다. 당시 주일 미대사 머피는 그의 회고록에서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6·25전쟁을 치룰 수 있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일본의 전진기지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4)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GHQ/SCAP. 연합군 군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포츠담 선언의 집행을 위해서 일본점령정책을 실시한 연합국군의 기관이다. 극동위원회 아래에 위치하며 최고책임자는 연합군최고사령관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소련계 전차 100여 대를 선두로 하여 6만 명의 북한군이 남침을 했을 때, 맥아더는 당시 일본에 주둔하던 모든 주일미군을 한국에 투입했다. 이에 일본인은 놀라운 속도로 일본 4개 섬을 거대한 보급창고로 변화시켰다. 일본인의 선박과 철도전문가들은 그들의 숙련된 부하와 함께 한국으로 가서 미군 및 유엔군 부대에서 활동했다. 이것은 극비사항이었다. 그러나 유엔군은 한국을 잘 알고 있었던 일본인 전문가들 수천 명의 지원이 없었다면 6·25전쟁에서 싸울 수 없었을 것이다.”⁵⁾

이러한 일본의 역할은 당시 국제적으로도 인정하는 부분이었다.⁶⁾

- (1) 만약 일본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했을 것이다(시카고 데일리 뉴스: 도쿄 특파원).
- (2) 일본은 유엔군의 전진보급기지 및 공군의 발진기지로써 6·25전쟁 기간 전략적으로 매우 유용했음이 증명되었다(포린폴리시 블레탄: 1951. 6. 22).
- (3) 미국이 일본이라는 전략기지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대규모적인 개입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1951. 6. 23. 북한 박헌영).
- (4) 당시 미8군사령관 리지웨이 대장은 그의 회고록에서 일본에서의 차량수리 및 재생, 서비스지원이 없었다면 6·25전쟁은 3개월도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일본지원의 중요성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바라지 않았다.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한국은 일본의 재무장설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1949년 2월 16일 이승만 대통령의 대일관은 아래에서와 같이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방임하면 일본은 민주주의를 포기하거나 미국

5) 古垣鐵郎(譯), 『軍人のなかの外交官』(東京: 鹿島研究所出版會, 1965), pp. 441-442.

6) 江口正夫, 「朝鮮戦争が日本に及ぼした影響等について」, 防衛研究所研究資料98-RO-1H, p. 27.

의 위협이 될 것이다. 미군이 일본에서 철수하면 소련의 전략에 용이하게 작용될 것이다. 만약 미국이 일본을 포기한다면 미국에 대항할 일소(日蘇) 동맹의 가능성은 없는지, 비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일본이 또 다시 세계정복을 감히 기도할지 모르며, 과거의 군국주의자들이 미국의 적국과 합세하여 미국을 정복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은 일본인의 뇌리에서 군국주의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과거의 무서운 야망을 추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는 공산주의 확장을 방어하기 위하여 정비를 완료한 한국에게 또 하나의 적을 만드는 것이다. 일본은 38선을 통하여 우리의 세력을 시험하고 있는 공산주의 확산에 대하여 강력한 민주주의 보루로서 발전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유에 대하여 또 하나의 위협이 된다.”⁷⁾

이승만은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와는 별개로 주일미군 철수를 적극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일본과 소련과의 동맹 가능성 등으로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공산주의와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배후의 일본이라는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일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일미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서울이 함락되었던 상황에서 1951년 1월 12일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군의 참가설에 담화를 발표하고 일본군은 중공군보다 먼저 격퇴하여야 한다⁸⁾고 강조할 정도로 일본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었다.

한편, 요시다 정권의 대한(對韓)인식은 어떠한을까. 요시다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한반도가 일본의 국가안보에 중요한 관계가 있음은 새삼 말할 나위 없

다. 역사적으로 일본에 대한 외부 위협은 한반도를 경유했다.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도 발단은 한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떠한가. 공산 세력이 북쪽을 장악하여 38선을 연하고 있다. 만약에 남쪽 부산까지 지배하면 일본의 안보는 심각한 위협에 빠질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현상은 만약에 과거의 일본이었다면 일본의 자위전쟁을 유발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태평한 분위기에 젖어 한가하게 마음을 놓고 향유하고 있는 것은 한국군과 유엔군이 함께 전선(前線)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있으나 일본은 안보조약에 의해서 미국의 보호를 받고, 한반도 전선은 유엔군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사부담을 줄이고 경이적인 경제발전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⁹⁾

이처럼 요시다는 한반도의 불안이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한반도를 대륙세력으로부터 일본을 지키는 전방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일본은 패전으로 영토가 반으로 줄어들었다”¹⁰⁾고 말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를 태평양전쟁의 패전으로 잃은 일본의 영토로 여기고 지금은 미국이 그 힘의 공백을 대신하고 있다는 게 일본정부의 인식이었다.

이러한 한일관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6·25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을 적극 활용했으며, 일본은 유엔지원을 명분으로 미국의 작전기 지로서의 역할과 후방지원 활동으로서 협력하였다.¹¹⁾ 6·25전쟁을 통하여 한국과 일본은 배타적 관계이지만 미국의 군사전략에 의해서 연동(連動)되었다.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3국공조의 원형은 6·25전쟁의 대응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7) 공보처, 『대통령 이승만 담화집』(공보처, 1953), pp. 142-143.

8) 대한민국 국방부, 『韓國戰亂 1年誌, 1950년 5월 1일-1951년 6월 30일』,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 p. C-86.

9) 吉田茂, 『世界と日本』(東京: 番町書房, 1963), pp. 148-149.

10) 위의 책, p. 150.

11) 三木秀雄, 『支援という名の防衛戦略』, 『防衛大學校紀要』, 第52輯(防衛大學校, 1985), p. 54.

3. 미국에게 한국과 일본의 정치 및 전략적 가치

(1) 한국

1950년 1월 12일,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애치슨 연설은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다. 이 연설에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미국이 방위책임을 지는 이른바 방위선은 알류산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아시아의 연안도서선이라고 밝힘으로써 한반도는 제외되고 있었다.¹²⁾

이 애치슨의 연설은 미국의 안보관점에서 작성된 1949년 12월 23일 대(對)아시아 정책문서(NSC48/1)의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주요한 전략적 이익 및 전쟁목표를 아시아에 두지 않았다. 소련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서유럽에서는 전략적인 공격, 아시아에서는 전략적인 방위가 기본방침이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한 노력을 서측에 집중하기 위해서, 동측방위는 최소한의 병력 및 물자를 투입한다”는 제약 때문에 미국의 능력에 맞게 아시아 방위선을 선정했던 것이다. 소련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아시아 방위선으로 일본과 오키나와, 그리고 필리핀이 포함되었다.¹³⁾

왜 한국은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되었을까. 이것은 미국에게 한국이 지녔던 전략적, 정치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결과였다. 미국에서의 한국에 대한 평가는 1947년 2월 25일 국무성, 육군성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한국에 대하여 미국이 조치할 행동강령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¹⁴⁾

12)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January 23, 1950, pp. 116-117.

13)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Vietnam Relations 1945-1967*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1), pp. 256-257.

14) “III Importance of Korea to the U.S.”, Record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먼저, 전략적으로 미국은 한국에 군대 또는 기지를 확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만약 극동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에 현재 주둔하고 있는 군대는 더욱 증강되지 않으면 오히려 미국에게 군사적인 약점이 되며, 아시아 대륙으로 공격작전을 전개할 경우에도 한반도는 우회의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만약 적이 한반도에 강력한 공군기지를 설치했을 경우, 미국이 동아시아, 만주, 서해 및 일본에서 수송이나 작전을 할 때 적의 방해받을 수 있다. 즉, 미국에게 한국은 현재는 군사적으로 이익이 없는 지역이지만, 적대국 특히 소련이 한반도를 지배하면 머지않아 극동 전체에서 미국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영구적인 군사중립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고 평가했다.¹⁵⁾

이어서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한반도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은 아시아에서 억압받고 있는 민족의 독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만약, 한국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주변지역에 대하여 우리의 지위가 손상되며 이러한 지역은 곧바로 소련의 압력에 굴복하게 된다. ② 한국은 중국, 일본 등 미국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한국사태는 이들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익에 중요하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한국을 친미자유독립국가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한국은 현재 미·소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소련보다는 미국의 민주주의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하다. 미국은 소련을 단호하게 봉쇄해야 한다. 미국이 약하게 대응하면 소련은 미국이 모든 면에서 우유부단하다고 판단

relations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45-1949, Department of State decimal file 895. 01/2-2547, National Archive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7, v. VI, pp. 608-618(이하는 FRUS라 약함).

15) 이 시기의 국가안보회의나 합동참모본부 및 극동사령부는 소련의 공격이 있을 경우 한국으로부터 철수한다는 계획을 작성했다. 三木秀雄, 「韓國の放棄と日本の防衛-朝鮮戰爭開始前における米國の極東戰略に關する史的考察」, 『防衛大學校紀要』, 第52輯社會科學分冊, 1986. 3, pp. 97-118.

하여 소련에 사기를 올려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¹⁶⁾

즉 미국에게 한국은 미·소 대결에서 세계에 대한 정치적 위신의 상징이지만, 전략적으로는 중요성이 낮았다. 이것이 한국정책에 대한 미국의 딜레마였다. 1947년 8월 4일 미국의 한국정책에서 국무·육군·해군 3성조정위원회에 제출된 정책문서(SWNCC176/30)는 “공산주의가 한반도를 지배할 상황에서, 미국은 현시점에서 한국으로부터 철수할 수 없다. 이 결과로 생기는 정치적 영향은 극동 및 전(全) 세계에서 미국의 위신에 중대한 손실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 한국을 지배하지 못하게 거부하면서 가능한 빨리 미국의 개입을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다.¹⁷⁾ 한반도를 소련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면서, 한편으로 가능한 빨리 미국은 한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딜레마였다.

1947년 9월 29일 국무장관 집무실에서 마셜 국무장관, 로버트 국무차관 등에 의해서 열린 한국문제를 검토하는 회의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의 권위는 상당한 자금이나 노력으로도 유지하지 못하며 그렇다고 한국에서 철수하면 극동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의 위신과 정치적 입장에 상당한 손실이 따른다. 악영향을 줄이고 가능한 빨리 한국에서 철수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써서 외부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했다.¹⁸⁾ 또, 이 회의에 앞서 9월 26일에 합참의 견해에서도, 군사안보 측면에서 미국은 한국에 군이나 기지를 유지할 만한 전략적인 이익이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독립에 진전이 없고 또 정치·경제적으로 재건되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의 안보에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과의 협력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¹⁹⁾ 이와 같이 미

16) 각주 14와 동일.

17) *FRUS*, 1947, v. VI, pp. 738-741.

18) *Ibid.*, pp. 820-821.

19) *Ibid.*, pp. 817-818.

국정부 내부에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서 빨리 철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철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치적 악영향을 막는다는 점에서 국무성과 군부와의 정책상의 견해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이 2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문제였다. 한국이 처한 모순되는 정치·전략적 위상에서 생기는 정책상의 딜레마를 미국은 유명무실한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과의 직접협상을 마무리하고 1947년 9월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여, 통일한국을 달성하고 한반도에서 미·소 양군을 철수시키려고 했다.²⁰⁾

(2) 일본

상기와 같이 미국이 극동전략차원에서 군사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한 반면 일본에 대한 전략적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미국의 세계전략은 유럽이 주전장, 극동지역이 부전장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을 논자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에서 독일과의 전쟁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며, 동맹을 간신히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원조밖에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독일이 항복하기 전에야 겨우 대량의 병력을 투입하여 희생을 최소로 줄이면서 승리의 막대한 보상을 받았다. 미국은 독일보다 일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다. 일본의 강한 해군력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위협이 되었고, 항상 미국의 태평양지배에 대한 위협이었다.²¹⁾ 대서양과 태평양의 양양(兩洋)전략에서 미국은 태평양 확보에 더 치중했다. 태평양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일본을 항복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20)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1943-1953』(한울아카데미, 2001), pp. 580-584.

21) 남주홍(역), 『제2차태평양전쟁』(동아출판사, 1991), pp. 44-45.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 본토를 공격하는 데 최소한 40만 명에 달하는 미군 사상자가 날 것으로 추산했으며, 소련의 對日戰 참가는 미국에게 매우 중요했다.²²⁾ 또한 스탈린은 일본이 1904년 러시아로부터 빼앗은 태평양에 대한 권리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었다.²³⁾ 이렇게 미국과 소련 사이 양국의 공동이익이 일치하여 일본을 파괴하는 데 연합전선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이 종료되면서 패전국 일본을 둘러싼 미국과 소련 사이의 주도권 쟁탈이 시작되었다. 일본이 항복한 후 8월 16일, 합동전쟁계획위원회(JWPC)는 '일본 및 일본 영토의 최종적 점령'이라는 제목으로 일본분할안을 냈다.²⁴⁾

이와 같이 일본분할안이 나왔던 8월 16일, 스탈린은 트루먼에게 홋카이도의 분할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트루먼은 제안을 받고 지체 없이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다.²⁵⁾

미국은 스탈린의 홋카이도 분할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쿠릴열도의 항공기지권을 요구하게 된다.²⁶⁾ 소련도 미국이 요구한 쿠릴열도에서의 항공기지권을 거절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에 대한 전후처리를 둘러싸고 양국의 지도자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었다. 패전 일본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는 국가가 태평양을 용이하게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쿠릴열도의 항공기지권을 요구했던 것은, 군사적으로는, 소련과 일본 사이의 계쟁(係爭)지역에 항공기지를 설치함으로써 소련의 태평양 진출로를 차단할 수 있는 쐐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일본이 다시 태평양의 위협세력이 되지 못하도록 포위·압박²⁷⁾할 수 있는 기지를 구축하려던

22) 박관숙(역), 『트루먼회고록』(한림출판사, 1971), p. 129.

23) 위의 책, p. 130.

24) 玉井勇夫, 『日本の分割』(東京: 學研, 1978), pp. 70-72.

25) 박관숙(역), 위의 책, pp. 201-202.

26) 위의 책, p. 203.

27) 논자는 미국이 일본을 포위·압박할 수 있는 기지는 오키나와를 비롯한 류큐제도, 오가사와라 제도, 쿠릴열도상에 위치한 북방도서를 말하며, 여기에 남한의 미군기지를 포함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스탈린의 홋카이도 분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쿠릴열도에 항공기지권 설치를 역으로 제의하여 소련과 일본 사이 영토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태평양에서의 위협이었던 일본을 제거하는데 미국과 소련이 동맹을 형성하였으나 전쟁이 끝난 후에 미·소 양국이 태평양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에 돌입하였으며, 이 주도권 장악 경쟁은 어느 쪽이 일본을 장악하느냐에 달려있었다.

애치슨도 그의 회고록에서 "일본이 패배한 것과 독일이 패배한 것은 다르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군에 패배한 것이다"라고 일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피력하고 있다.

태평양전쟁 이후 미국은 아태지역의 질서 형성에 소련이나 일본보다는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다. 그러나 국민당과 공산당과의 조정을 시도하였던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6년에는 국공내전이 다시 격화되었고, 1948년이 되면서 중국공산당이 우세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한편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유엔대표단의 입국을 거부하였고, 1948년 5월 남한단독으로 선거를 실시하여, 1948년 8월 15일 한국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북한에서는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북한정부가 수립되었다. 1949년이 되면서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우세가 압도적이었으며, 1월 말에는 인민해방군이 베이징을 장악하였다. 마오쩌둥은 공산당의 우세가 확실히 결정된 6월 30일, "중국인은 제국주의 진영으로 기울지 않고 사회주의 일변도로 나아가야 한다. 이외의 방법은 없다. 제3의 길은 없다"²⁸⁾면서, 소련에의 지지를 선언했고, 1949년 10월 1일 중공정권이 수립되고 국민당 정권은 대만으로 축출되었다.

중국공산당의 중국 장악은 미국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었으며, 이에 대응

하면 일본을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보았다.

28) 毛澤東, 『論人民民主專政』(1949年 6月 30日), 『毛澤東選集·第4卷』(北京: 人民出版社, 1971), p. 1473.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서는 일본 끌어들이기가 필요했다. 1949년 5월 6일의 NSC13/3, 미국의 대일정책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 (1) 평화조약 체결을 서둘지 않으며, 평화조약의 성격은 비(非)징벌적으로 한다.
- (2) 평화조약 체결까지는 미군을 주둔시키고, 평화조약 체결 이후에는 국제제도와 일본의 국내안정 달성의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3) 오키나와의 제반 시설과 북위 29도 이남의 류큐제도, 오가사와라제도, 마르쿠스섬 등은 합동참모본부가 필요한 제반시설을 장기적으로 확보한다. 이들 지역의 장기적인 전략적 배치에 대한 국제적인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4) 미 해군에서는 요코스카항을 상업기지로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충해야 하며, 오키나와 기지는 장기적으로 지배한다는 가정하에 해군기지로써 가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²⁹⁾

이렇듯 극동의 정세가 소련과 중공이 세력화가 될수록 미국은 평화조약을 완화해서라도 일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 필요했다. (2)의 장기적인 확보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과 전쟁을 할 경우 발진기지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의 경우에 대두될 수 있는 일본으로부터의 위협을 이들 기지에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NSC13/3이 책정된 직후 1949년 6월 15일의 문서인 NSC49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요건의 전략적 평가'에서 미 군부의 일본에 대한 방위개념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열도는 극동에서의 미국의 안보이익상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일본을 미국이 장악하게 되면 아시아대륙과 이에 인접한 소련에 대하여 미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일본의 인력과 산업능력은 전략적

으로 가치가 높다. 만약에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여 소련이 장악하게 되면 태평양과 남방진출에 군사적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아시아 연안 도서선(Asia offshore island chain)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일본이 그 중요한 위치에 있다. 미국의 전략목표는 일본의 소련 거부와 친미세력화에 있다. 평화조약에 일본 본토에서의 기지 설치권을 포함하며 평화조약 체결은 시기상조이다. 평화조약이 체결되려면 일본이 민주화가 되고 친미화가 되어야 한다.”³⁰⁾

이와 같이 미 군부는 공산진영과의 군사대응을 위하여 소련의 일본지배를 거부하고, 강화조약의 연기, 친미화, 일본 본토의 미군기지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1949년 6월 30일, 마오쩌둥의 소련 일변도 선언과, 같은 해 10월 1일, 중공정권의 수립은 중공과 소련의 세력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제1의 잠재적 국인 소련과의 대응을 위하여 미국의 중·소 이간정책이 실패함으로써 중국을 잃게 된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2(소련+중공):1(미국)이라는 세력불균형의 상황에서 일본의 전략적 위상이 높아진다. 아시아적 규모에서 최초의 전략문서라고 할 수 있는 NSC48/1(1949년 12월 23일)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입장'에서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관점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에 대한 전략적 위상을 강조하고 있다.

아시아의 잠재력은 전략적으로 볼 때 소련과 미국 어느 쪽이 점유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아시아의 잠재력 중에서 “일본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것은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국민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대규모 인적자원, 이미 개발된 산업적 기반 및 전략적 입지”³¹⁾라고 평가하면서 일본의 잠재력을 미국이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30) NSC49, “Current Strategic Evaluation of United States Security Needs in Japan” (June 15, 1949).

31) NSC48/1, “The Position of the U.S. with Respect to Asia”(Dec. 23, 1949)(Sect in 29).

29) NSC13, “Recommendations with Respect to U.S. Policy Toward Japan”(June 2, 1948).

볼 수 있다.

또한 아시아는 지리적 여건상 공격 및 방어의 측면에서 미국보다는 소련에게 더욱 가치가 있다. 만약에 소련이 일본의 산업시설을 장악하게 되면 극동지역에서 전략적인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판단에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은 다음과 같았다.

(1) 전쟁이 발발하면 전략적인 기본개념은 서쪽에서는 전략적인 공격(strategic offense)을, 동쪽에서는 전략적 방어(strategic defense)를 취한다.

(2)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의 병력 및 물자를 할당하여 동부지역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주력은 서부지역에 할당한다.³²⁾

소위 미국은 유럽을 주 전장으로, 아시아 전선을 부 전장으로 구분하였다. 위와 같은 2개 전장에서 미국의 군사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았다.

(1) 미국은 앞으로 소련이 침공하면 최소한의 군사력을 아시아 지역에 유지한다.

(2) 도서선은 방위의 제일선(first line of defense)이며, 공산주의 세력의 통치지역을 줄일 수 있는 공격의 제일선(first line of offense)이다. 이러한 공격에 미국은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지만 대규모의 병력(armed forces)은 포함되지 않는다.

(3) 방위의 제일선은 일본, 류큐열도 및 필리핀이다. 미국은 아시아에 최소한의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아시아의 주요지역과 연결할 수 있는 주요 병참선을 확보한다.³³⁾

이상과 같이 미국은 소련과 연합하여 일본의 위협을 제거했으나, 일본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극동지역의 냉전이 싹트기 시작했다. 태평양전쟁 이후 미국은 병력감원과 공군위주의 전략에 의존하여 일본을 비롯한 도서선을 중심으로 극동방위선을 설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도서선을 방위의 제

32) NSC48/1(Sect in 32).

33) NSC48/1(Sect in 33).

일선이면서 공격의 제일선으로 정의한 것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방어선으로 미국의 군사력으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다. 나중에 고찰하겠지만 방위선 '밖'의 지역은 유엔에 위탁한다는 것이었다.

4. 미국의 6·25전쟁 개입: 유엔의 집단안보

(1) 단독개입의 회피

한국이 정치적으로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는 평가에서 생기는 딜레마는, 한국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한국문제에 계속 유엔을 개입시켜 미국의 단독개입을 회피한다는 미국의 한국정책의 근저였다.

1949년 6월 27일 육군성이 작성한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한 후에 북한에 의한 전면침략이 가지는 의미'라는 문서에서, 미국이 공산군의 전면침략에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은 공산지배로 들어갈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응으로서 ① 현재 한국정부에 파견되어 있는 미국인 및 군사고문단의 요원을 탈출시키는 긴급철수계획을 실시한다. ②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여 신속하게 유엔안보리에 제기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특히 ②의 경우 이점으로서, 유엔이 한국정부를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많이 공헌해 왔고 미국은 한국문제를 국제적인 성격으로 알릴 수 있다. 그리고 안보리에 위임된 모든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유엔에 대한 소련의 태도를 시험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책임과 행동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38선의 불가침,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유엔의 승인을 받아 미군 및 유엔회원국의 작전부대를 한국에 투입하여 경찰행동을 하거나,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한국에 다시 미군을 투입하는 조치는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는 군사력으로도 충분하지 않지만, 유엔 안보리의 조치가 실패했을 경우에 미국의 입장은 다른 회원국이 협력하여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고려하면 미군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만 군사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단독 작전으로 상황을 종결시키지 못하면 분쟁이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³⁴⁾ 이 문서에서 합참본부는 유엔헌장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안보리가 유엔군을 조직할 수 있을 경우에만 실행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³⁵⁾ 따라서 한국문제를 유엔에 위임하려는 방침은 1949년 9월 2일 애치슨의 유엔연설에서 보다 명확해졌다. 여기서 그는 유엔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공헌하였다고 강조하고 “유엔 한국위원회가 한국에 계속 잔류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견해다. 이 기구의 주요 책임은 군사적 충돌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유엔의 영향력을 살려서 분쟁을 방지하고 통일의 가능성을 찾는 데 있었다. 또한 상황을 감시 및 보고하는 위원회의 권한은 적대행위를 막는 데 충분하다”고 말하고, 유엔 한국위원회에 분쟁방지를 맡기려고 했던 것이다.³⁶⁾

그리고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의 연설이 있었던 다음 날, 상원의 비밀청문회에서 애치슨은 어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한국은 북한이 단독으로 일으키는 분쟁에 대응할 수 있지만, 중국이 일으키거나 혹은 중국이나 소련이 강력하게 지원하는 침략에는 대응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 유엔이 가능한 행동을 할 것이다. 미국 단독의 군사력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만약 유엔헌장에 의해서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는 이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유엔을 통한 집단안보체제에 의해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³⁷⁾

34) *FRUS*, 1949, v. VII, pp. 1046-1056.

35) *Ibid.*, pp. 1056-1057.

36)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October 3, 1949, p. 490.

37)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Senate, *Reviews of the World Situation 1949-1950*. Historical Series, v. 8(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79), p. 191.

6·25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 미국이 곧 바로 유엔안보리에 북한의 침략을 제기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웠다. 당시의 러스크 국무차관보에 의하면, 이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기로 한 결정은 서울주재 무초 대사의 최초보고에 의해서 취한 조치였다. 그리고 트루먼은 애치슨에게 필요하면 안보리에 결의안을 제출하도록 했다.³⁸⁾ 결국 6·25전쟁에 주일미군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투입되었다.

(2) 6·25전쟁기 한·미·일 관계

애치슨 연설은 1950년 1월 5일 트루먼 대통령이 타이완에의 불개입을 선언한 후인 1월 12일에 있었다. 국무장관의 위치에 있는 주요 정책결정자가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알류산열도에서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필리핀에 이르는 선이다”라고 발표했다. 여기서 한국은 미국의 극동방위선 밖에 위치한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국가안보회의(NSC)의 주요멤버가 국가비밀을 발표했다는 것은 많은 논쟁을 낳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외교의 주무장관이 왜 국가비밀을 누설했을까.

최근에는 버젠스, 도널드 맥클린이라는 소련 내 영국인 스파이를 통하여 12월 하순에 승인된 NSC48의 내용을 스탈린이 알고 있었다는 논의도 유력하다.³⁹⁾ 애치슨은 적국에 알려진 비밀을 공개했을 뿐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진보계열 학자들은 수정주의 관점에서 주한미군 철수, 트루먼의 타이완 불개입 선언, 애치슨의 극동방위선 공개 등은 공산권의 선제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또는 이를 이용하여 미국이 군비증강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을 시험대로 삼았다는 것이다. 즉 음모론이나 공성계(空城計)로 설명하고 있다.

38) *FRUS*, 1950, v. VII, pp. 127-128.

39) Gaddis, *We Can Know*, 72; Weathersby, “Should We Fear This?”, p. 11. 이종판 역, 『일본의 6·25전쟁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p. 192.

여기서는 군사교리 관점에서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극동방위선의 전략적인 의미와 한·미·일 3국의 관계를 구체화할 수 있다. 미국은 소련과의 전면전을 상정하여 NSC48/1에서와 같이 도서선(島嶼線)을 방위의 제일선이면서 공격의 제일선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극동방위선(defensive perimeter)으로 자구 그대로 해석하면 타인의 침입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울타리에 해당된다. 애치슨이 언급했던 도서선은 적의 침략을 허용할 수 없는 불후퇴방위선이며 군사교리로 '공세전환선'이라고 구체화할 수 있다.

이러한 도서선에 해당되는 일본, 류큐(오키나와), 필리핀 등 3개 지역도 차등을 두었는데, 즉 일본은 지탱(hold)할 지역으로, 류큐 및 필리핀은 필히 확보(secure)할 지역으로 나누고⁴⁰⁾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 본토보다는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우선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사교리 관점에서 지탱(hold)할 지역은 전투지역전단(FEBA)작전에 사용되는 용어으로써, 지휘관이 필히 방어할 지역이며 전투력 배치의 한계선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확보(secure)할 지역은 더 이상 양보를 허용할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서선은 태평양지역에서 공세전환기지로서 판단한 것이다. 이 도서선에 홋카이도가 제외되어 있다. 한국은 미국의 극동전구에는 포함되고,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지역임은 틀림없다.⁴¹⁾ 그러나 미국에게 한반도(남한지역)는 작전지역 중심이 아니고 폭이 협소하여 정면으로부터의 압박과 측면으로부터의 포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었고, 따라서 한국은 지상병력을 배치하면서까지 방어할 만한 전략적으로 사활적 이익이 걸렸던 곳은 아니었다. 이와 같이 보면 홋카이도가 극동방위선에서 제외된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라는

40) JCS 1920/1, ALLIED STRATEGY(Map), (6 May 1949). 三木秀雄, 『朝鮮戰爭史: 統聯合作戰』(東京: 統合幕僚學校, 2005), p. 10.

41) 지금까지 고찰한 결과, 한국은 미국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나 전략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

천연 해자(moat)는 방어 시에는 적의 공격을 유인할 수 있는 천연장애물이 되고, 반격할 경우에는 해상을 통하여 신속한 투입이 가능한 양호한 기동로가 된다. 따라서 한반도라는 지역확보가 우선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위와 같이 미국의 극동방위선 개념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은 태평양과 미 본토를 방위하기 위한 중층적 방위구조를 이루고 있다. 군사교리개념으로 작전지역은 영향지역(Area of Influence), 경계지역(Security Zone), 주방어지역(Main Defense Area), 후방지역(Rear Area)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애치슨라인 밖의 한국 등은 경계지역으로, 애치슨라인의 안쪽인 일본 등은 주 방어지역으로, 필히 지탱해야할 태평양제도는 후방지역으로 구분하여 3선방어개념(중층적 방어권역)에 의한 군사전략을 구상하였다고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미 극동방위선의 군사적 개념⁴²⁾



42) 미 극동방위선의 군사적 개념은 미군교범 용어를 응용하여 논자가 정리한 것임.

그렇다면 선행연구들에서 많이 읽을 수 있었던 “미국이 한국을 포기했는가”에 대하여 정리해 보자. 첫째, 군사작전에서 부대철수나 지역포기는 흔히 일어날 수 있다. 6·25전쟁 이전의 미군 작전계획에는 철수계획(NEO)만 있었다는 의미에서도 미국은 한국을 경계지역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방어작전이나 지연작전의 경우, 주 방어지역에서 방어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하여 경계지역에서 운용되는 경계부대는 방어진지 준비를 위한 시간을 획득하고, 적 첩보 획득, 적 공격지연, 기만 및 파괴, 정찰 및 차장 임무를 맡게 되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면 통상 철수하게 된다. 이때 부대의 철수는 지역의 포기를 의미한다.

둘째, NSC문서나 애치슨이 강조한 것처럼 극동방위선의 ‘안’은 미국의 군사력으로 책임방어하고, 극동방위선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유엔의 권위’를 통하여 개입의지를 밝힌 것으로 한국을 포기했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자체대응+유엔회원국(+미국)이라는 다른 차원의 중층적 수단을 준비하고 있었다.

만약에 초기부터 미국과 소련의 전면전으로 시작되었다면 작전계획대로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이 주 전장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자(功者)가 북한군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밖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 지역에 해당하는 한국에 유엔군의 이름으로 미군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미 극동방위선을 지키려 한 것이다.

전쟁 기간 일본은 미 극동군의 작전지역이면서 후방지역으로 기능했다. 작전지역(Area of Operation)은 공격이나 방어작전시 부여된 기본임무의 완수를 위한 군사작전 및 군사작전에 부수되는 행정에 필요한 전쟁지역의 부분으로, 작전전구(Theater of Operation)라고도 한다.⁴³⁾ 이를 근거로 보면 일본은 전쟁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국의 작전전구(KTO: Korean Theater of Operation)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그 범위 내에서 작전한다. 그러나 6·25전쟁 발발 당시에는 미 극동군의

43) 육군본부, 『戰略戰術用語集』, 教育參考101-20-5(1984), p. 434.

작전전구는 한국과 일본의 구분이 없어 자유자재로 항공이나 항해할 수 있었고, 또한 6·25전쟁 초기의 전쟁지휘는 도쿄에 위치한 극동군사령부에서 실시되었다. 그렇다면 일본도 미국의 작전지역에서 전쟁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5.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은 대일강화조약을 조기에 추진하려고 했고 일본의 재군비에 관한 움직임도 빨라졌다. 그 결과, 1951년 초에 일본과의 강화조약을 협상하기 위해서 당시 국무성 고문인 덜레스를 단장으로 사절단을 파견하였다.⁴⁴⁾

이때 국무장관 및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덜레스에게 강화조약의 협상지침을 전달했다. 미국의 주요 목적은 일본을 자유진영에 편입시키고, 공산주의의 새로운 확대에 대항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을 완수시키는 데 두고,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도서방위에 확고하게 군사적으로 개입한다. 다음으로, 일본이 자위력을 점차로 확보하며,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일본, 미국, 거기에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태평양 도서국가 간의 상호원조협정을 맺는다. 이 협정은 회원국이 비(非)회원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며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공격해도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데 있었다.”⁴⁵⁾

44) 五十嵐武士, 『對日講和と冷戰 戦後日米關係の形成』(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8), pp. 117-122.

45) *FRUS*, 1951, v. VI, Part 1, pp. 788-789.

그러나 탈레스 사절단이 일본 및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 관계국을 방문한 결과, 이른바 태평양조약을 체결하려는 미국의 기대는 멀어지고, 이들 국가 간의 조약체결로 수정해야 했다. 그 이유로서 영국은 도서선을 묶는 협정에서 홍콩이나 말레이반도가 제외되면 위험이 증대된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도 국민여론이 일본과의 동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이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일본에 미군의 주둔권만 가진다면 괜찮다는 판단이 그 배경에 있었다.⁴⁶⁾

이와 같이 도서선을 묶는 하나의 집단안보구상은 보류되고 그해 9월 미·일 간에 안보조약이 조인되었다. 이 조약은 미국정부의 의향을 반영하여, 제1조에서 미국의 육군, 공군 및 해군을 일본 국내 및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주일미군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일본의 안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극동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른바 극동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초 탈레스가 국방장관에게 제시한 조약 초안에는 일본 국내 및 그 부근에 배치되는 미군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나 국내의 폭동·소란에 대한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 배치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합참본부를 비롯한 군부는 전략적 견지에서 미군의 책임이 일본의 영토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에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였다.⁴⁷⁾

이러한 군부의 견해를 수용하여 탈레스는 극동조항을 추가했다.⁴⁸⁾ 또 군부는 주한유엔군이 필요하다면 유엔이 일본기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가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탈레스도 한국이 공격받았을 경우에 주일 미군이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⁴⁹⁾ 어쨌든, 이 극동조항

46) *Ibid.*, pp. 183-185. 태평양 조약구상에서 미일방위조약으로 미국정부가 수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五十嵐, 앞의 책, p. 203.

47) 조약 초안은 *FRUS*, 1951, v. VI, Part I, pp. 1186-1187, 1232-1233. 초안에 대한 군부의 견해에 대해서는, pp. 1256-1261.

48) *Ibid.*, pp. 1226-1227.

49) *Ibid.*, pp. 1227, 1259.

을 규정함으로써 일본에 미국의 극동전략을 지원하는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 조약 전문에는 “모든 국가는 개별 및 집단적 자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자국의 방위를 위해서 미군 주둔을 바란다는 취지와, 그리고 자위권이라는 명목으로 재무장의 길을 터준 것이다.⁵⁰⁾ 한편, 6·25전쟁은 1950년 10월 중공의 개입으로 유엔군이 고전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다음 해 6월 소련의 말리크 유엔주재 소련대표가 휴전협상을 제안함으로써 1951년 7월 10일부터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개시되었다. 이 회담은 군사경제선과 비무장지대 설정을 시작으로, 휴전감시기구, 포로교환에 관한 합의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본국으로 귀환을 바라지 않는 전쟁포로 문제로 양측이 대립, 1952년 10월에 회담은 휴회로 들어갔다. 이러한 가운데 6·25전쟁의 조기종결을 내걸고 탄생한 아이젠하워 정권은 교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기획위원회에서 검토된 1953년 4월 2일 ‘한국에서 가능한 행동방책 분석’이라는 문서(NSC147)는, 전면전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완전철수를 하지 않는다, 또한 휴전협상에서 전쟁포로 문제를 공산 측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미국이 조치할 행동으로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 만주 및 중국 본토에 대한 군사작전의 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2) 그 제한을 해제하는 두 개의 방책이 있다. (1)에 대해서는 (a) 미군의 제한적인 철수를 위해서 한국군을 건설한다. (b) 미국의 휴전안을 적에게 동의하게 한다. (c) 적의 군사력을 최대한 파괴하여 전쟁을 유리하게 해결한다. (2)에 대해서는 (d) 전쟁을 유리하게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둔다. (e) 한반도의 중심라인을 유지하면서, 적의 군사력을 최대한 파괴하여 전쟁의 유리한 해결을 목표로 한다. (f) 공산군을 패배시켜, 통일·민주한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만큼 군사행동을 전개한다.”⁵¹⁾

50) 室山義正, 『日米安保体制』上(東京: 有斐閣, 1992), pp. 117-119.

51) *FRUS*, 1952-1954, v. XV, Part J, pp. 838-840.

4월 8일에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이 문서가 검토되었을 때, 한국정책에 대한 중요한 방침이 결정되었다. 즉 휴전에 대해서는 이미 공산 측과 합의된 조항은 수정하지 않지만, 미국은 휴전 목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데 두고, 만약 이 목적을 일정기간 내에 달성하지 못하면, 휴전을 무효로 여긴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덜레스 국무장관의 발언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이때 아이젠하워는 미국이 바라는 최종적인 정치적 해결은 통일·민주한국이라고 밝히고 있었다.⁵²⁾ 그러나 NSC147에서는 새로운 연구가 추가되어 결정은 보류되었고 그 후 국가안보회의에서 원폭사용의 여부도 포함하여 검토되었다.⁵³⁾

한편, 4월 들어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부상병 포로교환협정이 조인되고 4월 26일 휴전회담이 재개되자 통일한국을 실현할 수 없는 휴전에 당초부터 강력하게 반대하였던 이승만의 태도는 더욱 굳어졌다.⁵⁴⁾ 이 때문에, 한국정부로부터 휴전회담에 대한 동의와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국무-합참본부 합동회의를 중심으로 3개의 방책이 검토되었다. 제1안은, 휴전에 반대하는 이승만을 연금하여 임시군정을 수립한다. 제2안은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다. 제3안은 한국에서 미군의 전면철수였다. 이 가운데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데 군부와 국무성이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안이 채택되어⁵⁵⁾ 6월 6일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에게 방위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⁵⁶⁾

6월 15일부로 작성된 문서 '한국 휴전에 이어서 조치할 미국의 방책'에는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여, 정치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의 조치로서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내세우고 있다.⁵⁷⁾ 그러나 이 문서에서 합참본부는,

52) *Ibid.*, pp. 892-895.

53) *Ibid.*, pp. 75, 1012.

54) 외교안보연구원, 『한국외교의 20년』(외무부, 1967), pp. 55-57.

55) *FRUS*, 1952-1954, v. XV, Part 2, p. 1506.

56) U.S. Department of State Historical Office, *American Foreign Policy 1950-1955 Basic Documents*(New York: Kraus Reprint Co. 1974), v. II, pp. 2729-2731.

상호방위조약 체결은 한국정부가 휴전에 반대하지 않고, 또한 실행하는데 협력한다. 한국군을 유엔군사령관의 지휘 아래 두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이 문서는 상호방위조약에서 “한국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보전을 보장한다”는 것에 대해 미군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했다.⁵⁸⁾ 이를 위하여 7월 2일 국가안보회의에서 NSC154의 상호방위조약에 관한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대신에 “한국의 안보에 관해서는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와의 조약에서 미국의 개입과 같다”고 수정하였다.⁵⁹⁾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국방위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를 휴전에 협력시키기 위한 것으로, 덜레스는 이승만에게 휴전에 방해하지 못하게 3개의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것은 한국 부흥을 위한 경제원조, 휴전회담에서의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 및 공동보조, 그리고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었다.⁶⁰⁾

6. 한국의 중립화 방침과 일본의 군비증강

1953년 6월 8일 그때까지 휴전회담에서 풀기 어려웠던 포로문제가 타결되고, 포로교환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휴전협상이 마무리되기 시작했다. 국무성에서는 6월 15일 '한국에 관한 미국의 기본목표를 결정하기 위하여'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 문서는 휴전체결을 전제로 미국이 취할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두 개의 기본목표를 설정했다. 하나는, 한국이 현재의 경계선에 의해서 분단된 상태에서 미국과 군사동맹이 맺는 것이

57) *FRUS*, 1952-1954, v. XV, Part 2, pp. 1170-1173.

58) *Ibid.*, pp. 1189-1190.

59) *Ibid.*, pp. 1302-1303.

60) 또한 그는 조약체결을 인정했던 또 하나의 이유로 이승만이 일본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위협에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Ibid.*, pp. 1462-63, 1473, 1507.

고, 다른 하나는 통일, 중립한국의 실현이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대신, 공산 측으로부터 통일한국이 정치적으로 미국에 지향하도록 동의를 얻고, 한국정부의 주도로 통일한국의 영토 및 정치적 보전, 유엔가입, 한국군의 수준과 성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후자의 통일, 중립한국의 실현이 결론 및 권고로서 채택되었다. 그 이유로서 우선 공산 측도 전자보다 후자를 바람직하게 여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 측이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의 대륙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쓰일 것을 우려하여 북한체제를 희생해서라도 미국의 기지건설을 저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또, 미국으로서도 통일한국이 지금까지 목표지만 소련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방위할 수 없다.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도 공산군이 압록강, 두만강 너머로 빠져있는 게 낫다는 것이다.⁶¹⁾ 이 문서는 우선, 국무·합참본부 합동회의에서 다시 검토되었다. 이때 군부에서, 중립한국이 다시 중국공산군의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통일, 중립한국(案)을 공산 측이 수용할 지 애매하다, 그리고 중립한국에 군사원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지적이 있었다. 특히, 군부가 한국의 중립을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중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군사적 공백을 틈타 공산 측이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중립한국에 대하여 공산 측의 침입이나 전복활동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미군의 개입이 증대되며, 나아가 중립한국을 만들고 나서 미군이나 유엔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이것을 공산 측이 양보로 받아들임으로써 미군과 유엔군의 위신을 잃게 된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⁶²⁾

1953년 7월 2일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이 문서는 6월 25일 NSC157로서 의제가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군부의 중립한국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군부는 지금까지 한국은 전략적인 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61) *Ibid.*, pp. 1180-1183.

62) *Ibid.*, pp. 1183-1188, 1288-1291.

미국과 유엔의 최종목표가 통일한국이라면 통일, 중립한국을 건설함으로써 위신을 높일 수 있다,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여 극동에서의 균형에 맞게 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반론했다. 그리고 군사적 공백이 발생한다는 군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중립한국을 스스로 방위할 수 있는 적절한 무장을 하는 것으로 하여, NSC157/1로서 승인되었다.⁶³⁾ 단지, 이 한국의 중립화는 휴전 이후에 공산 측과의 정치회의에서 미국이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회의 후에 외교경로를 통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 딜레스는 이 중립한국안을 공산 측이 받아들일도록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중국의 유엔가입문제를 협상재료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었다.⁶⁴⁾

이후 한국에서는 1953년 7월 휴전협정 체결,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이나 중국 측으로부터 정치회의 예비회담 제안 등 일련의 큰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추이에 따라서 한국 정책 전체를 수정하기 위하여 11월 9일 NSC170이 작성되었다. 이 문서는 지금까지 미국의 한국정책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정치회의가 실패하여 다시 전투가 벌어졌을 경우에 대비한 NSC167/2나 한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성된 NSC156/1을 정리한 것이다.⁶⁵⁾

11월 19일 국가안보회의에서 NSC170이 의제가 되었을 때, 군부에서 중립한국은 공산 측에 굴복될 우려가 있다고 제기하였다. 대통령은 그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중립한국은 비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공산 측에 제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안이고, 또 친미성향의 중립한국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딜레스는 중립한국에 오키나와 미군의 지원이나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이나 다른 자유국가들이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는 것은 자유롭고, 중립한국은 미국의 군사동맹국이 아니며 기지설치나 제공도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⁶⁶⁾ 이러한 국가안보회의에서 논

63) *Ibid.*, pp. 1300-1312, 1344-1346.

64) *Ibid.*, p. 1456.

65) *Ibid.*, pp. 1600-1606.

의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하여 NSC170/1로서 11월 20일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 문서에는, 장기목표로서 국제적 합의에 의해서 정치 및 영토보전을 보장하고, 국내의 안전 및 강대국 이외의 공격으로부터 영토를 방위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한 자유, 통일한국을 이룩하는 데 두고, 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의 당면목표로서, 침략에 대응하는 유엔개입을 지원, 전복이나 침략에 의한 공산주의의 지배를 방지, 한반도에 자유정부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힘을 유지하는 데 두고 중립한국안(案)을 공산 측과 정치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한국에서 힘의 지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군사행동을 사용하지 않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는 한편, 현재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국분단을 받아들여, 한국을 미국의 안보체제에 포함하여 군사동맹국으로 하는 것을 명기하고 이를 위해 방위조약의 비준과 한국의 방위력을 유지하는 것 등을 내걸고 있었다. 게다가 중립화되어도 미국의 경제 및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문구도 추가되었다.⁶⁷⁾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은 일본에 군사력 강화를 요구했다. 1952년 8월 7일자 대일정책문서(NSC125/2)에서, 일본의 안보는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지위에 중요하고, 일본의 안보에 대한 미국 단독책임을 덜기 위해서 일본이 시급하게 자위력을 확보하여 태평양지역의 자유국가의 방위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일본의 자위력을 갖추는 제1단계로서 10개 사단의 지상병력과 적절한 해·공군력을 건설한다고 했다.⁶⁸⁾ 이 목표에서 합참은 극동의 군사 불균형을 시정하는 동시에, 일본방위를 위해서 미군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견해를 분명히 하고 있다.⁶⁹⁾

66) *Ibid.*, pp. 1616-1620.

67) *Ibid.*, pp. 1620-1624. NSC170에 대하여 국무성의 수정요청에 관해서는 *Ibid.*, pp. 1613-1615.

68) *FRUS*, 1952-1954, v. XIV, Part 2, pp. 1300-1308.

69) *Ibid.*, p. 1290.

이 NSC125 문서의 방침은 1953년 6월 아이젠하워 정권에서도 재검토되어 일본의 경제력에 맞게 방위력을 갖추는 방침도 채택되었다. 이것은 재정균형을 목표로 하여, 경제와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신정권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헌법상 제약이나 취약한 경제상황 등이 고려되고 있었다.⁷⁰⁾ 이 때문에, 일본재무장은 극동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일본경제발전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으로 진행되었다.

1953년 5월에 델레스 국무장관은 서측 진영 방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상호안보장법(Mutual Security Act)에 의한 원조를 일본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MSA와 관련하여 7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다음 해 3월에 MSA협정이 조인되었다. 그 제8조에서 일본정부는, “자국의 정치 및 경제안정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국의 방위력 및 자유세계의 방위력 발전 및 유지에 기여한다고 했다. 또, 1953년 10월에 워싱턴에서 실시된 이케다·로버트슨 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에 32만 5천 명 규모의 육군을 요구했고 일본은 경제상황으로 18만 명을 제시했다. 결국,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1957년도까지 18만 명으로 증강하기로 타결되었다.⁷¹⁾ 이것은 일본의 경제력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무렵 합참본부는 ‘극동군사력을 향상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NSC5416; 1954년 4월 10일자) 문서에서, 일본의 재무장을 극동의 자유세계 결집을 기본으로 하여, 자위력을 갖추고 극동의 집단방위에 공헌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증강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⁷²⁾ 게다가 8월 20일 ‘미국의 대(對)극동정책 재검토’(NSC5429/2) 문서에서도, 일본 스스로 방위할 수 있는 능력과 극동의 집단방위에 기여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 합참은 여전히 34만 8천 명의 지상병력을 요구하고 있었다.⁷³⁾

70) *Ibid.*, pp. 1438-1439, 1448-1452.

71) 室山義正, 앞의 책, pp. 139-154.

72) *FRUS*, 1952-1954, v. XII, pp. 417-419.

73) *Ibid.*, v. XII, p. 772, v. XIV, Part 2, pp. 1761-1167.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비증강에 대한 일본의 강한 거부반응이나, 또 당시의 일본 내부 상황 및 일본의 공산중국에의 접근 등의 이유로 방침이 변했다. 그 결과, 12월 22일자 NSC1429/5의 문서에서는 “극동의 집단방위에 공헌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점진적인 군사력 건설”이라는 문구는 삭제되었다.⁷⁴⁾ 또, NSC125/2에 대신하여 다시 작성된 대일정책문서(NSC5516/2 1955년 4월 9일)는, 지금까지 일본군사력의 증강을 요구하는 방침에서 후퇴하여, “일본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저해하는 군사력 증강은 요구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경제적 안정을 우선하였다.⁷⁵⁾

극동에서 일본군사력의 공헌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로, 한국에 대한 평가는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이전, 한반도에서는 1953년 3월의 정치회의 예비회담이 결렬되고, 나아가 1954년 4월 제네바 19개국 회의의 개최와 결렬(6월)로 한국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공산 측과 정치협상의 길이 막힘으로써 미국은 한국분단을 현실로 수용하고, 한국을 군사동맹국으로서 지위를 굳혀 나갔다. 앞의 NSC5416 문서에는, 한국군을 극동에서의 자유진영 군사력의 일원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대만정부군과 함께 장차 극동방위의 공헌자로서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⁷⁶⁾ 그 당시 한국군은 6·25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원조로 증강되어 20개 사단 64만 명에 이르렀다.⁷⁷⁾ 인도차이나가 위기에 놓였을 때, 미국정부에서는 한국군의 투입도 검토했었고 탈레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을 정도였다.⁷⁸⁾

한국을 극동방위에 개입시키려는 방침은 NSC5429/2 문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 문서에는, 일본, 필리핀, 중화민국(대만)을 포함해 마닐라 조약과 ANZUS 조약을 묶어 서태평양 집단방위조약을 구성하여, 여기에 한국도 포

74) *Ibid.*, v. XII, pp. 1062-1068.

75) *FRUS*, 1955-1957, v. XXIII, Part I, pp. 52-62.

76) *FRUS*, 1952-1954, v. XJI, Part 1, pp. 411-420.

77) 李鍾元著, 『東アジア冷戦と韓米日關係』(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6), pp. 76-77.

78) 위의 책, pp. 94-98.

함시켰다.⁷⁹⁾ 그리고, 지금까지의 한국정책의 기본이 되었던 NSC170/1을 대신하여 다시 작성된 정책문서(NSC5514/2: 2월 25일)에는 이 방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NSC170/1과 같은 장기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당면목표로서 한국을 태평양의 자유진영에 실질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세력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정치협상의 제안으로서 중립한국안(案)은 삭제되고 그 대신에, 유엔 감시 아래 자유선거에 의해 친미적인 통일한국의 달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정치협상이 생산적인 경우에 공산 측과 유엔과의 사이의 협상에 추가하기로 명기되었다.

아울러 다시 공산군이 침략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실행은 물론, 한국과 아시아국가들과의 정치적·군사적 관계를 강화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정신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한국과 아시아 자유국가들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NSC5429/2 문서에서와 같이, 한국을 포함한 서태평양 집단방위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제기되었다.⁸⁰⁾

7. 결론을 대신하여

본 연구를 통하여, 태평양전쟁의 전후처리과정, 냉전의 진행, 6·25전쟁에 의해서 연합국인 미국과 소련은 적대관계로, 적대국인 미·일 간은 동맹관계로, 배타적인 한일관계는 미국을 매개로 하는 공조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을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평양전쟁의 연합국인 미국과 소련은 전후처리 과정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소련과 이를 봉쇄하려는 미국 사이에 냉전이 시작되면서

79) *Ibid.*, pp. 769-774.

80) *FRUS*, 1955-1957, v. XXIII, Part 1, pp. 42-48.

한국, 일본, 중국 등 5자의 세력관계도 재편성되었다. 특히 미국은 소련과 냉전의 골이 깊어갈수록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일본 끌어안기로 전환되었다. 게다가 태평양전쟁 이후 동북아에서 역할을 기대했던 중국은 공산 혁명에 성공함으로써 소련에 합세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정치적 전략적 가치는 더욱 상승된다. 한편 미국에게 한국은 미·소 대결에서 자유세계에 대한 정치적 위신의 상징이지만, 전략적으로는 중요성이 낮았다. 미국은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됨으로써 1947년 9월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였다.

둘째, 한·미·일 3국의 관계에서 미국에게는 한국의 정치적 가치와 전략적 가치를 사이에 두고 항상 딜레마가 따랐다. 그것은 소련과의 전면전쟁이 일어날 경우, 전략적 가치가 없어 한국에 군사개입이 필요 없다는 전략적 평가, 그렇다고 해서 미군을 철수하면 한반도가 공산화됨으로써 극동이나 전(全)세계에 미치는 정치적 악영향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중요성, 이와 같은 상호모순에서 생기는 딜레마를 해결해야 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트루먼 정권은 6·25전쟁에, 유엔의 집단안보체제에 의해서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개입했다. 이렇게 대응함으로써 한반도의 공산화를 방지해야한다는 정치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미국 단독의 군사개입을 회피할 수 있었다.

셋째, 6·25전쟁 기간,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군사교리의 측면에서 한·미·일 관계를 고찰해 보았다. 일본-오키나와-필리핀의 극동방위선은 적의 침략을 허용할 수 없는 불후퇴방위선으로 '공세전환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극동방위선을 군사교리에서 보면, 한국은 태평양을 방위하기 위한 경계지역(GOP), 일본은 주방어지역(FEBA)에 해당된다. 만약에 미국은 소련과의 전면전쟁이었다면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이 주 전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6·25전쟁은 북한군에 의한 침략이었으므로 한반도 밖으로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지역에 해당하는 한국에 유엔군의 이름으로 미군을 신속하게 투입하였다. 미국은 도쿄에 위치한 극동군사령부 겸 유엔군사령부에

서 전쟁을 지휘하였으며 일본을 공군 발전기지, 군수 및 후방지원기지로 활용함으로써 일본도 미국의 전쟁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1951년 9월, 미국은 태평양전쟁을 법리적으로 종결짓는 일본과의 강화조약을 소련진영을 제외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체결하고, 같은 날 미일 안보조약까지 체결하여 일본을 재무장하여 극동방위에 활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의 일본에 대한 군사력 증강 요구는 일본의 경제사정이나 정치불안 등의 이유로 일본정부에 의해서 거부되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공산 측과의 정치협상이 실패하면서 중립한국안(案)까지 거론되었다. 1953년 10월 1일 아이젠하워 정권이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것은 휴전에 반대하는 이승만 정부로부터 휴전에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을 재무장하는 데 실패하고 이와 연동하여 한국분단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군사강국으로서의 한국을 태평양안보의 새로운 공헌자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끝으로, 오늘날의 한·미·일 공조(共助)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의 관계를 보자. 미국에게는 태평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한국은 대(對)공산권 방어의 1선(一線)에서, 일본은 2선에서 공헌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일본에게도 대(對)공산권의 방벽으로서 한국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헌법상 제약으로 미군에 의한 안보무임승차를 하면서 그 대신에 미군의 작전에 기지 및 시설을 제공하는 등 후방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에게는 북한의 남침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으로 억제하고 미일동맹이 연동하여 후방에서 지원되고 있다. 지금도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후방사령부가 도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또한 미일안보조약에 의해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방지하는 병마개 역할을 함으로써 일본의 군사위협을 우려했던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범위에서 극동은 공통지역임을 알 수 있다. 즉, 미일조약에는 “극동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미조약에서는 “태평양 지역에서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의 적용범위로 보면 미일 안보조약(극동)보다 한미방위조약(태평양)이 넓다. 이것은 일본이 재무장을 하더라도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통제하면서 극동에 묶어두려는 미국의 의도 라고 읽을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09. 12. 9, 심사수정일 : 2010. 1. 14, 게재확정일 : 2010. 2. 9)

주제어 : 6·25전쟁, 한·미·일 공조, 태평양전쟁, 평화조약, 일본재무장, 유엔, 집단안보,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안보조약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War and Foundation of the ROK-US-Japan Cooperation

Lee, Jong-pan

This study considered the progress in which the US and Soviet those were the Allied Nations went into the hostile relation, the US and Japan those were the hostile country went into the allied relations,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ROK) those were exclusive each other formed the cooperation system mediated by the US through post-war settlement process of the Pacific War, progress of the cold war and the Korean War. In sum, This results are as the followings.

First, after the Pacific War, the US wanted Japan to be joined in order to prepare for the war against the Soviet as the cold war had been gradually aggravated in the post-war settlement process. On the other hand, the ROK was a symbol of the political prestige but strategically less important to the US. This was a dilemma of the US. The US intended to resolve this problem by transferring this from the US-Soviet Committee to the UN.

Second, in September 1951, the peace treaty which means the legal conclusion of the Pacific War was made with focusing on the US and excluding the Soviet. In the same day, the US intended to exploit this for defending the free world by remilitarizing Japan through the US-Japan Security Treaty. Meanwhile, in October 1, 1953, it is for obtaining the agreement and cooperation of *Syngman Rhee* with regard to the cease-fire that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made a mutual defence treaty with the

ROK. Japan, however, declined the remilitarization by insisting the nation's and economy condition. Then, the US accepted the division of Korea as a reality and recognize Korea as a new contributor to the Pacific Security. The base of the today's Korea-US-Japan cooperation is the ROK-US Security Treaty and the US-Japan Security Treaty.

To the US, for the security of the Pacific obtained through the war against Japan, Korea and Japan are recognized as the first and second defence line, respectively.

To Japan, the existence of the ROK is considered the defence wall of the anti-communism, and rear-supporting such as providing the US strategy with bases and facilities in return for the security free-riding by the US Forces. To the ROK, for responding to the invasion from the communism, it can be blocked by the ROK-US alliance and supported from the rear side by the US-Japan alliance.

Moreover, the US-Japan Security Treaty plays a role as a bottle cap restraining the enhancement of Japanese military power because the US is mainly in charge of the Japanese defense, so that the security of the ROK feared by Japanese armed threat is guaranteed. In other words, in the US-Japan Security Treaty it is stipulated that they contributes to the world peace and security keeping in the Far East, and the ROK-US security treaty said that they respond cooperatively to the armed attack from outside in the Pacific area. Thus, the application range of the ROK-US Security Treaty is more wider than that of the US-Japan Security Treaty. This is the US' intention of tying Japan in the Far East by controlling the Japanese advance to the Pacific.

Key Words : The Korean War, The ROK-US-Japan Cooperation, The Pacific War, Peace Treaty, Japan Rearmament, UN, Collective Security, ROK-US Security Treaty, US-Japan Security Treaty